

다산포럼



송혁기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넘어질 수밖에 없다면 잘 넘어져야

바람과는 달리 이런 상황이 종식되려면 지나온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게다가 앞으로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 주기가 점점 짧아진다고 하니, 이쯤 되면 우리는 비관으로 이어진다. 도대체 우리가 해 오던, 혹은 하려던 일들을 다시 할 수 있는 날이 다시 오기는 하는 것일까?

유도( 유도)에서 가장 큰 기술은 상대의 중심을 빼앗아 넘어뜨리는 것이다. 그런데 유도를 배울 때 넘어뜨리는 기술보다 먼저 배우는 것이 있다. 넘어지는 기술, 즉 낙법(落法)이다.

필자는 고등학교 때 체육 시간의 일부로 유도를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 도복까지 갖춰 입고 한 학기 내내 낙법만 연습하다 끝났다. 살다 보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 낙법 하나만 몸에 익혀 두어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신 선생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다만 몸이 아니라 머리로만 기억한다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낙법의 핵심은 부상을 최소화하는 데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 넓은 부위로 충격을 분산시키고 속도를 완화해야 한다. 이때 손을 먼저 짚거나 무리하게 버티려 하다가는 큰 부상을 당할 수

있다. 애초에 넘어지는 상황에 이르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제대로 넘어지는 낙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낙법이라는 말은 한자어이지만 중국과 일본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일본의 유도에서 낙법에 해당하는 어휘는 '우케미'인데, 한자로는 '수신(受身)으로 표기된다. 1차적으로는 수동(受動) 내지 수세(守勢)의 의미를 지닌다. 주도권을 상대에게 내준 상태에서 공격을 받아들이는 방법의 일환이 낙법인 셈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다.

바로 몇 달 전까지 언필칭 4차 산업혁명을 내세우며 새로운 미래를 그리던 21세기의 인류는 순식간에 전대미문의 수세(守勢)에 직면했다.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려 버티다가는 더욱 큰 곤경을 초래할 수도 있다. 어떻게 하면 잘 넘어지면서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가장 애써 살펴야 할 것은 사회적약자들이다. 낙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채 넘어지면 손목이나 발목에 체중이 실리

면서 큰 부상을 입기 쉽다. 취약 계층에 더 먼저, 더 심각하게 가해질 충격을 사회 전체로 분산시켜서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방역 체계가 취약한 국가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도 절실하다.

넘어지면서 비로소 보이는 것들에 잠시 눈을 주는 것도 좋겠다. 미세먼지가 걷힌 시야에 펼쳐지는 새파란 하늘, 저마다 때 되면 어김없이 피고 지는 들꽃들, 주도권을 쥐고 목표를 향해 달릴 때는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다. 과학의 발전으로 인류는 많은 질병을 정복해 왔지만, 1980년대부터 이전에 없던 신종 감염병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는 원래 자연 가운데 별문제 없이 존재해 오던 것들을 인류가 과도한 개발과 파괴로 불러낸 것이라고 한다.

낙법의 목적은 다시 일어서는 데에 있다. 잘 넘어짐으로써 몸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다시 옷매무새를 추스르며 일어서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낙법에 능하더라도 넘어지는 데 고통이 없을 수는 없다. 다만 다시 일어섰을 때, 넘어지는 고통으로 인해 얻은 성장의 시야를 버리지 않았으면 한다. 수세는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청춘 특·특

일상의 한 부분이 된 유튜브



이지유  
동신대 식품영양학과 2학년

간 소통도 할 수 있다.

유튜브는 구독자 수와 영상 시청 시간을 합산해 일정 수준을 넘게 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구독자 수가 10만 명이 넘으면 실버버튼, 100만 명이 넘으면 골드버튼을 받게 된다. 명예와 돈을 한꺼번에 쥌 수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초등학교 장래 희망 3위에 '유튜버'가 오르기도 했다.

초등학생뿐인가. 연예인들은 물론 유치원생부터 70대 노인들까지 개인 채널에 영상을 올리면서 유튜브 대전(大戰)에 참전하고 있다. 그만큼 콘텐츠가 다양해져서일까? 페트병 폴라나 생수 뚜껑이 헛돌아 열리지 않을 때, 병기가 막혔을 때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문제를 이제는 유튜브 검색만으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최근 유튜브는 실시간 방송을 통해 더욱 더 진화하고 있다. 내가 채팅창에 적은 글을 유튜버가 소개하고, 그 내용이 하나의 콘텐츠가 되기도 한다. 유튜버와 독자가 실시간으로 함께 콘텐츠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또한 유튜브는 진입 장벽

이 높지 않다. 스마트폰 하나 또는 웹이 달린 컴퓨터만 있으면 누구나 유튜버가 될 수 있다.

나 역시 유튜브를 자주 보면서 개인 채널을 운영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스타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싶기 때문이 아니다. 유튜버가 더욱 대중화될 테고 낯 놓고 보고만 있다가는 웬지 나만 뒤쳐질 것 같다는 조급함이 생겨 버렸다.

그래서 뛰어난 게 동신대학교 포켓마스터 4기 활동이다. 학교나 학과와 관련된 홍보 동영상 만들어 유튜브와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기 위해, 그리고 너무 딱딱하지 않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 요즘 친구들과 열심히 머리를 굴리고 있다.

건물 소개, 교과목, 상장, 교수님 소개나 인터뷰 등의 형식적이고 딱딱한 틀을 벗어나, 내가 다니는 동신대 식품영양학과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실습 재료를 준비하고 조리실에서 도시락을 만들어 먹는 영상을 만들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영상을 기획하고 편집해 완성하기까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할 수 없는 일도 아니었다.

실제 유튜브를 만들어보니 기획과 편집만큼 중요한 게 제목과 썸네일이었다. 썸네일은 동영상의 내용 중 가장 흥미 있는 부분이나 주제와 적합한 부분을 영상 제목 옆 작은 화면을 통해 사진 형식으로 미리 보여주자는 장치다. 여러 개의 비슷한 내용의 영상 중에 사람들이 제목과 썸네일을 보고 더 호기심을 자극하는 영상을 선택해 클릭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

이처럼 유튜브를 찾아 보던 입장에서, 유튜브를 만들어보면서 생각이 폭이 조금 더 넓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간단한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유튜브를 시작해 보자. 혼자 막연히 도전하려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친구들과 함께 해 보는 걸 추천한다. 끼가 넘치는 친구와 컴퓨터 활용, 영상 편집 등에 소질 있는 친구가 못한다면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유튜브는 이제 우리의 일상이 돼 버렸다. 개인 유튜브를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스펙이 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社說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줄도산만은 막아야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임금 채권 확보를 위해 회사 법인 계좌를 압류함에 따라 지역 경제에 파문이 일고 있다. 자금 운영에 발이 묶인 회사 측이 급여 지급은 물론 협력업체의 납품 대금마저 결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광주지법은 잇그제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가 낸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금호타이어와도 급 계약한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980년대부터 이전에 없던 신종 감염병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는 원래 자연 가운데 별문제 없이 존재해 오던 것들을 인류가 과도한 개발과 파괴로 불러낸 것이라고 한다.

낙법의 목적은 다시 일어서는 데에 있다. 잘 넘어짐으로써 몸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다시 옷매무새를 추스르며 일어서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낙법에 능하더라도 넘어지는 데 고통이 없을 수는 없다. 다만 다시 일어났을 때, 넘어지는 고통으로 인해 얻은 성장의 시야를 버리지 않았으면 한다. 수세는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협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여름휴가비조차 지급하지 못했다.

문제는 채권 압류 여파가 협력업체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금호타이어는 최근 납품업체와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 결제를 연기했다. 250여 개에 이르는 광주·전남 협력업체들은 대부분 재료 구입비 등을 선납하고 있어 대금 지급이 지연되면 자금난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재 금호타이어의 부채는 2조 원대에 달하고, 매달 금융권에 갚아야 할 이자만 60억 원 규모라고 한다. 더욱이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매출도 급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 계좌 압류가 장기화되면 신용도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경영 악화는 물론 협력업체들을 줄도산으로 내몰 수도 있다. 따라서 사측은 보다 더 진전된 타협안을 제시하고 노조는 압류를 취소하는 등 한발씩 양보함으로써 경영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해안 상생과 균형 발전 두 마리 토끼를

전남도·경남도·부산시 등 남해안권 3개 시도가 참여하는 '남해안 상생발전 협의회'가 최근 출범했다. 지난 2018년 '남해안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한 이후, 1년 7개월간 논의 끝에 일귀 낸 값진 결실이다.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과 균형발전을 이끌 '남해안 시대'의 본격 개막이라 할 만하다.

이들 3개 시도 시도지사들은 지난달 31일 부산에서 만나 남해안의 동반 성장을 견인할 7개 공동 협력 과제를 논의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담보하기 위한 '남해안 상생발전 협약' 서명식을 가졌다. 이날 논의된 공동 협력 과제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 경전선(부산-목포) 고속화 추진, 남해안 관광도로 건설, 남해안권 국제 요트대회 성공 개최, 남해안 상생발전 향만물류도시 협의체 구성, 남해안권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위기 대응 공동협의체 구성,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남해안권 공동 대응 등이다.

이들은 또 '남해안 상생발전 협의회 공동성명서'를 통해 실질적인 국가 균형발전 실험을 촉구하기도 했다. 수도권 집중현상의 고착화를 야기할 수도권 유턴기업 규제 완화를 중단해 줄 것,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경우 공공기관의 투자·출연 기관 및 금융기관까지 확대할 것, 비수도권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 주도 균형발전 뉴딜사업'과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한 것이다.

우리는 새롭게 출발한 남해안 상생발전 협의회에 대해 기대 섞인 마음으로 지켜보고자 한다. 이들 3개 시도의 만남이 단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되면서 공동 현안을 논의할 때, 지역 발전은 물론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특히 협의회가 수도권에 대해해 비수도권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모아 가기를 바란다.

無等鼓

여야의 '부동산 정책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주거 문제를 넘어 사회의 공정성에도 직결되기 때문에 정치적 폭발성이 크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물러설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 등이 담긴 '임대차 법안'이 대표적인 경우다.

이 과정에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국회 5분 발언이 크게 주목을 받았다. 윤 의원은 민주당이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법안 처리를 강행한 부당성 지적을 강하게 비판이 쏟아졌다. 전세 대란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방안을 차분하게 제시하기보다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등 정치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

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의 마지막 법안인 전월세신고제 처리에 나선다. 또 7·10 점을 꼬집으면서, 미흡한 부동산 정책으로 전세 대란이 발생하고 서민들의 월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크게 흥분하지 않고 여당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성급하게 반응, 오히려 민심의 역풍을 맞고 있다. 특히 윤준병 의원은 임대차 법안이 전세 제도를 소멸시킬 것이라는 윤희숙 의원의 지적에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또 박병계 의원은 "윤희숙 의원의 발언은 실은 임대

이 보호를 외친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이를 두고 민심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간 전세가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 왔다는 점에서 여당의 정책적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전세 대란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방안을 차분하게 제시하기보다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등 정치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의 마지막 법안인 전월세신고제 처리에 나선다. 또 7·10 점을 꼬집으면서, 미흡한 부동산 정책으로 전세 대란이 발생하고 서민들의 월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크게 흥분하지 않고 여당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성급하게 반응, 오히려 민심의 역풍을 맞고 있다. 특히 윤준병 의원은 임대차 법안이 전세 제도를 소멸시킬 것이라는 윤희숙 의원의 지적에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또 박병계 의원은 "윤희숙 의원의 발언은 실은 임대

기 고

의사를 늘리되 한의사도 육성해야



배동진  
전남도 교육지원과장

과 대학을 설립, 한의사 등의 의료인을 양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정부의 의료 정책은 한결같이 서양 의술 보급과 서양 의료인 양성에 주력해 왔다. 한의사와 한약사, 한의 간호사를 양성하는 국공립 한의과 대학은 단 한 곳도 없다. 한의사나 한약사가 되려면 모두 사립 대학교의 한의과 대학과 한약과 대학을 다녀야 한다. 말하자면 한의사와 한약사 양성은 국가가 책무를 저버리고 있기 때문에 민간 대학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의료 정책은 수천 년 동안 이어 오고 있는 한의학(중국에선 중의학이라고 한다)을 중시하는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고, 서양식 의료인 양성도 병행하면서 균형 있는 의료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수천 년 동안 시행해 왔던 한의학 정책을 짓뭇개고 있는 실정이다. 의과대학 정원 확충과 공공 의대 설립 추진 방안엔 반드시 국공립 한의과 대학 설립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의사 단체는 예외 없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증원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돌입

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서울 용산구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등 정부가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료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하고 나선 이유는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이다. 시민이 요구하는 의료 서비스 확충과 향상보다는 잣대에 눈이 멀어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의사가 늘어나면 자기네들이 가져가야 할 몫이 적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의 의료 서비스 수준은 서양 의술을 도입한 150여 년의 세월 동안 눈부신 성장을 해 왔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처치 과정을 보더라도 정부의 대처 능력과 함께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의 눈물나는 봉사 정신으로 훌륭하게 극복하고 있음은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며 공감을 느끼는 있는 바이다.

그렇지만 한국의 의료인 수는 OECD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의료인들이 놓여준 지역을 기피하고 서울 등 수도권과 대도시 병원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전남이나 경북 등은 의료 서비스 수준이 낙후되어 있다. 정부가 의과대학

이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농어촌 지역의 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건을 내세우는 건 공여지책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어서 마땅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국공립 대학에 한의과 대학과 한약과 대학을 신설해 한의약 분야의 의료인 양성에 나서야 한다. 현대식 서양 의술은 서양 의술대로, 한국의 전통 의술인 한의학 의술은 전통 한의학 의술대로 경쟁력이 있을 뿐 아니라 전통 방식대로 '1탕, 2구, 3약' 또는 '1침, 2구, 3약'이라고 할 정도로 뜸과 침, 약(탕약)과 점료사 등 대대로 직업을 이어 가며 의술을 익혀 그 효과가 뛰어났다.

이밖에 '민간요법'을 체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사실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병의원이든 한의원이든 민간요법이든 가리지 않고 질병이 낫기를 고대한다. 현대식 병원의 고비용 저효율 치료 방법보다는 저비용 고효율의 치료 방법이 있다면 한의원이든 민간요법이든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환자들에게 치료 방법과 수단을 선택할 권리를 주어야 한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주 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기사 자곡(국무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